

정부, 내년 중소기업 자금지원 6조원 공급

정부는 내년도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사업 규모를 올해보다 11.7% 증가한 총 6조1천 813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고, 금융권에 대한 신용보증을 통해 42조 5천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이 최근 개최된 중기특위회의에서 심의 확정된 2002년도 중소기업청이 최근 개최된 중기특위회의에서 심의 확정된 2002년도 중소기업육성시책을 보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창업·투자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과 전통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IT화 지원, 해외 시장 개척에 필요한 자금지원 등이 주요 뼈대를 이루고 있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 자금을 올 1천 841억원에서 2천 24억원으로 확대지원할 방침이다.

자금 지원내역을 보면 기술혁신개발 사업에 1천 43억원, 산학연 컨소시엄사업 411억원, 이전기술의 실용화사업 70억원, 개발기술사업화 500억원 등이다.

또한 자금지원을 통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1천개를 발굴·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자금과 창업자금을 대폭 확대해 벤처투자자금을 1천억원에서 2002년에는 1천500억원 늘렸으며, 창업지원도 올 2천200억원에서 2천700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유한회사인 벤처기업에 대해 사원수의 상한을 상향조

정해 현재 50인에서 300인으로 늘렸으며, 벤처기업간 주식교환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도 대폭 손질할 방침이다.

정부는 벤처기업 못지않게 전통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IT화 지원사업을 확대해 올 8천개사에서 내년엔 1만개사로 확대하고 오는 2003년까지 3만개 기업의 IT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e-Biz화 기반구축을 위해 정보화 인력 1만명을 양성하고 전자상거래박람회 개최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자생력을 높이는데도 투자를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과 IT화 못지않게 자금 지원을 통한 경영안정이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경영안정자금의 규모를 총2조 2천 583억원으로 책정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을 확대해 올 7천 600억원에서 내년엔 8천900억원까지 늘리고 42조 5천억원을 금융권을 통해 보증을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의 생산현장 작업환경개선을 위해 신규로 141억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제품 공동상표개발지원에 3억원, 중소기업제품의 제조물 책임제도 대응지원사업에 10억원을 추가로 배정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지원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재정자금 500억원을 출자해 중소기업 회생을 지속지원하고 소상공인 및 여성기업의 경쟁

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올 2천200억 원에서 내년에는 2천700억원 확대했다.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수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올 341개사에서 내년에는 1천200개사로 늘렸다.

산자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경감한다

내년부터 기존 전기요금의 1천분의 65로 부과 및 징수되던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담금이 1천분의 45.91로 완화된다.

산업자원부는 전기사업법 제 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6조의 규정에 의해 전기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전력산업기반의 부담금을 경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를 했다.

또 산자부는 내년 상반기 중전력산업의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 및 VISION을 담은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을 통해 공익적 성격이 약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동시에 기금 부담금을 축소할 방침이다.

개정안 제안이유에 대해 산자부는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 13조 및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거 내년 1월 1일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에 통합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기금에 해당하는 부분과 전력산업구조개편 이후의 전력관련 연구개발사업, 전원개발지원사업 등 필요 최소한의 사업만을 반영, 기금부담율을 적정수준으로 조정 전기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새 개정기준에 따르면 현행 최종 소비자가 내는 전기요금이 한전수익부분과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담금부분 및 부가가치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부담금 증가분(2개월 약 400억원)의 10%(dir 40억원)만큼 소비자 요금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

전기업종 4분기 수출 호조

전기업종은 3·4분기에 매출·수입이 전분기 보다 증가세를 보였으며 4·4분기에는 수출부문도 호조를 띠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자원부, 산업연구원이 합동으로 조사한 제조업 경기실사(BSI)지수에 따르면 3·4분기 전기업

종의 매출은 전분기에 비해 지수 4.0으로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수입은 4.1로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전기업종의 수출은 2·4분기 대비 3·4분기에 BSI지수 3.8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4·4분기에는

3·4분기보다 4.0으로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특히 4·4분기 지역별 수출전망에서는 미국이 3.9, 일본 4.5, 유럽 4.4, 중남미 4.4 아시아 4.4 등으로 BSI지수를 나타내 미국지역이 테러사태의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전기업종의 생산설비 가동률 BSI지수

는 3·4분기에 전분기 대비 4.1로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4·4분기에는 3·4분기보다 3.7정도에 그칠 전망이어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조사됐다.
 BSI지수는 4.0이상이면 전분기 보다 증가, 4.0 미만일 경우 감소를 나타낸 수치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연구개발 사업 33개 과제 67억원 지원

산업자원부는 올해 전력산업 연구개발사업 가운데 33개 지원과제를 새로 선정, 67억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그동안 한전이 공익차원에서 수행해 왔으나 전력산업 민영화 계획에 따라 정부 주도로 전환한 것으로 전력산업기반조성기금을 재원으로 쓰게 된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산자부는 사업참여 희망기업과 기관을 모집하고 있으며 한전전력연구원 기반조성사업실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산자부는 또 전력산업 연구개발 지원대상 사업을 올해 4개(전략적선도기술개발사업, 공공전력기술개발사업, 전력산업공통요소기술 개발사업, 전력기술인프라조성사업)에서 내년엔 6개로 확대하고 사업비도 올해보다 대폭 늘어난 9백 37억원을 늘릴 방침이다.

정보통신부, 전통산업 IT화 촉진

정보통신부는 전통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응용 소프트웨어 임대(ASP)산업을 디지털 경제의 신산업으로 육성키 위해 정보화 촉진기금 45억원을 투입, 이달부터 업종별 ASP 보급 확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는 ASP서비스가 중소기업의 IT화를 촉진하는 최적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에도 성공모델의 부족과 수요기업의 신뢰부족등으로 인해 서비스 업체

의 투자가 위축되고 보급이 지연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ASP서비스의 불신을 없애기 위해 단계별로 서비스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서비스의 안정성과 연속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인증하는 'ASP 인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특히 전문지식 및 인력부족, 재정적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IT중소기업을 위해 앞으로 5~10

개 업종을 선정해 그룹웨어, 경영관리, 소프트웨어, ERP(전사적 자원관리), SCM(공급망관리), CRM(고객관계관리), 지불 서비스 등 각종 서비스를 ASP방식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업종·기업군 별로 최대 8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이달 안에 ASP 지원사업의 대상 업종 및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이번 사업을 위해 향후 1년간 정보화촉진기금 45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ASP 구축사업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정보화촉진기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기로 했다.

정통부는 또한 다양한 ASP서비스의 성공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ASP사업자가 오프라인 업종의 단체 또는 기업과 공동으로 수요를 발굴, 신청할 경우 사업계획을 정밀 평가해 지원대상으로 선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이버ASP 홍보관'을 건립, 대외홍보에 활용하는 한편 전국순회설명회도 갖기로 했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국내의 경우 300여개 기업이 ASP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업여건이 여의치 않아 ASP 업체의 수익구조가 열악한 편"이라며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OEM 수출 稅지원 촉구

대한상공회의소가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수출업체의 법인세 특별감면과 추정세액 경감 등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의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의는 재경부와 국세청에 중소기업의 조세감면제도를 개선키 위한 건의서를 제출하고 OEM 수출업체의 법인세 특별감면과 추정세액 경감(가산세 감면), 분할납부 허용 등 제도의 보완을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국세청이 중소기업체등을 지원하기 위해 20개 업종을 대상으로 법인세액의 10~30%를 감면해주는 특별세액감면제도를 시행해왔으나 최근 제조업에서 위탁생산에 의한 OEM 생산방식

으로 전환하는 업체가 늘어남에 따라 전환한 이후의 감면세액에 대해 추징에 나서자 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상의는 OEM방식 대신 고품질·고부가가치 브랜드화 전략을 추구하는 정책방향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나 자기상표로 수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영세수출업체들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위탁생산방식으로 전환한 OEM수출업체에 대해서도 법인세 특별감면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금추징이 확정된 기업들에 대해 추정세액에서 가산세를 감면해 주고 나머지 세금은 5년 정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 해당 업체들의 숨통을 터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올 미집행 정책자금 생산구조 고도화 투입

올 연말까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 등을 위해 6832억원의 정책자금이 지원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책정된 정책자금은 지난 9월말 추가로 조성된 4500억원을 포함해 총 2조9003억원으로 이 가운데 76.44%인 2조 2171억원이 현재까지 관련 중소기업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집행되지 않은 자금 6832억원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구조 고도화를 위해 올 연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사업별로는 지원되는 정책자금은 경영안정지원사업이 1752억원,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 1752억원,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 837억원, 개발기술사업 511억원, 중소벤처창업지원 1043억원, 소상공인 지원사업 650억원 등이다.

하지만 투자조합 출자사업과 지방중소기업 예탁사업 예산은 이미 소진돼 집행계획이 없다.

중진공이 현재 집행한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 집행율은 88.8%를 기록, 총 7500억원의 예산 가운데 6663억원이 지원됐다.

경영안정 지원사업은 3050억원의 자금이 집행돼 63.5%의 지원율을 보였으며 수출금융지원사업은 총 예산의 절반수준인 248억원(47%)밖에 지원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기술 사업화에는 총 289억원이 지원돼 36.1%의 집행률을 기록했으며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총 예산의 79.9%인 2550억원이 지원됐다.

그밖에도 중진공은 구조조정조합출자사업에 129억원(25.8%), 자산유동화지원 300억원(30%), 협동화사업 1332억원(72%), 중소벤처창업지원 2157억원(67.4%), 농공단지입주지원 368억원(69.4%)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출금융지원사업 집행률 부진에 대해 중진공 관계자는 “지난 7월말까지 수출실적 700만 달러 이하인 기업과 L/C, D/A, D/P 결제조건으로 계약한 수출업체만 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하지만 지난 7월말 이후 700만달러 이상 수출기업은 물론 T/T, M/T 결제조건으로 수출계약을 체결한 업체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돼 9월 이후 신청업체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자금과 벤처창업자금, 기술개발사업화 자금의 경우 지난 9월말까지 모두 소진돼 추가로 45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원함에 따라 집행률이 떨어지게 됐다”며 “실무처리에 1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오는 11월말까지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